

프랑스 다문화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김현진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www.kci.go.kr

프랑스 다문화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김현진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목 차》

1. 들어가기
2.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배경
 - 2.1. 역사적 배경
 - 2.2. 사회·정치적 배경
3. 프랑스 다문화정책
 - 3.1. 다문화정책의 특징
 - 3.2. 특별한 다문화정책 : 미성년 대상
4.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고찰
 - 4.1.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 4.2.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5.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
6. 나가기

<Abstract>

Kim Hyun Jin. 2020. 8. 12. **The implications of french policies to Korean societ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6, 47-7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French multicultural policies to Korean society. France has the longest history of immigration in Europe therefore this country has not only abundant experiences of success but also failure. The immigration policies of France has

been strictly controlled and closed against other cultures due to French people's unity. The result is that especially muslim immigrants including their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have not adapted well to French society. On the other hand, anti-immigration has spread to the French due to the economic crisis and the fear of terrorism. This problem has caused serious social conflict between French and immigrants. In spite of this the French people have implemented multicultural policies that are very generous and inclusive to foreign minors who are noun adults. This paper suggests to apply these policies after analyzing French society's problems and causes to ensure these will have a positive future for our society's multicultural policies. **(Busan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

[Key words] France, muticultural policy, immigration, minors, social integration, implication

1. 들어가기

한국사회는 이미 국제결혼, 외국인노동자 등 이민유입국으로 다인종·다문화 국가¹⁾로 급변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8월 기준으로 한국사회가 외국인 100만(전체 인구의 2% 이상)명을 초과하였고,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2020년 4월 말, 현재 약 218만 명²⁾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다른 문화와 고유의 정체성을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포용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의 가장 큰 쟁점은 기존 사회

1) OECD 기준, 한 나라의 전체 인구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된다.

2) 법무부 발간. <통계월보> 2020년 4월호, 12쪽.

구성원들과 이주민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할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현대의 시대적 상황 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여러 가지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을 다방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나라 중에서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는 프랑스가 100년이 넘는 다문화사회의 긴 역사를 이어 오면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성공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이기에,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다문화정책을 고찰해봄으로써 한국 다문화정책에 대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2.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배경

본 장에서는 프랑스 이민역사의 초기부터 이주민 유입 과정으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형성 과정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배경을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1. 역사적 배경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그 역사는 B.C. 1세기, 로마가 프랑스의 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유입된 로마인부터로 본다. 그 이후 라틴계, 게르만족, 노르만족, 켈트족 등 다양한 소수 민족이 프랑스 민족에 의해 정복 전쟁과 집단이주, 합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문화사회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노동력의 유입과 함께 문화·예술의 발전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주민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었다.³⁾

프랑스의 이민 역사는 ‘문화·예술 이민’ 과 ‘정치이민’ , 그

리고 ‘경제이민’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문화·예술 이민’은 르네상스 시대, 루이 14세 통치 기간에 이탈리아의 예술과 문화 영역의 인력들이 유입되면서 중세 이후 18세기까지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다음으로 19세기 초반 정치적 망명에 의한 ‘정치이민’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자유와 평등을 슬로건으로 내건 것에 영향을 받아 소련이나 동구권의 반체제 정치인들, 남미의 칠레나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를 피해 온 정치 망명자들로부터 쿠르드족 등에 이르는 이주민들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이민’은 프랑스보다 앞선 산업혁명으로 높은 기술을 가진 영국 기술자들의 유입을 시작으로 다른 유럽국가와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노동력을 들여오면서 그들이 프랑스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 이민의 역사를 시간적 흐름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⁴⁾

첫째, 프랑스 산업화의 시기인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력의 필요성에 의해 한해 평균 4~5만 명의 이주민들이 유입되면서 1880년대 초에는 100만 명에 달했다.⁵⁾ 이때는 노동자들이 프랑스 주변국인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이민자들로 대부분 유럽 국가 출신의 젊은 층으로, 이때 노동자들은 프랑스와 유사한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공존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못 하면서 살아갔다.

둘째, 세계 1차 대전 때로 전쟁을 위한 노동력이 요구되었고, 전쟁을 후에는 국가 재건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에 유럽을 넘어 식민지로 향하게 된다. 이때부터 프랑스에 무슬림 이주민

3) 정혜수(2016), 한국의 이중언어 정책에 관한 비교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 논문, 63쪽.

4) 상계 논문, 64쪽.

5) 마은지(2015), 프랑스 이주민의 민족 통합,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Homo Migrans Vol.13. 38쪽.

들이 대거 몰려오게 되었고 처음에 프랑스 제국주의의 깃발 아래에 약 3만 명 정도, 대부분은 광부였던 알제리인들과 모로코인들이 프랑스에 유입되었다. 이후 약 175,000명의 무슬림 이주민들이 프랑스 군대에 징집되거나 원주민 부대에 편입되었다. 전쟁 후에 국가 복원 사업을 위한 노동력으로 약 7만 명의 알제리인들과 그에 준하는 수의 모로코인들이 프랑스에 유입되었다.⁶⁾ 그 결과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인과 프랑스 전쟁에 도움을 준 무슬림까지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세계 2차 대전 무렵부터 1974년까지로 세계대전 후 국가 재건설을 위한 인력이 요구되었기에 외국인 이주민을 본격적으로 유입하게 된다. 이전에는 대다수 유럽 출신의 이주민들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인들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특히 3D⁷⁾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남성 노동자가 시급해져서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마그레브 지역⁸⁾의 이슬람 이주민들의 노동력을 들여오게 되었다.⁹⁾ 가족단위의 이민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이 프랑스에도 불어 닥쳐 실직자들이 증가한데다가 이주민들이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임으로써 정부는 외국인 이주민 유입을 중단하게 되었다.

넷째, 1974년 이후의 시기로 1974년 7월 법안을 통해 가족 재결합과 정치적 망명의 경우만 이민을 허용하고, 이전의 이주민들은 본국 귀국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을 공적으로 중단하였으나 이주민 가족 결합이나 장기 불법 체류자에

6) Sofos, Spyros A. and Tsagarousianou, Roza(2013), *Islam in Europe. England* : Palgrave Macmillan, 43.

7) 3D : Dirty, Dangerous, Difficult

8) 북서아프리카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의 지역으로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이슬람 수니파에 속한다.

9) 박상영(2011), 프랑스 다문화 학교교육정책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22쪽.

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새로운 불법 체류자 유입 등을 위한 행정적 처리가 계속되었기에 이중적인 다문화 모습을 보였다. 그 후에도 외국인 이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주거부족 문제는 사회 문제에서 정치 영역까지 확장됨으로써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기까지 이른다. 이후 프랑스는 200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적 다양성 선언에 동참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오랜 기간 이주민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국적제도를 몇 차례 개정한 바 있다. 처음 19세기 중반에 속지주의의 도입은 당시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속인주의였기에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그 배경은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특히하게도 프랑스인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차별 방지 차원에서 시행하여 이주민 자녀들에게도 국적을 부여하였다. 이후 20세기에 국적제도를 다시 개정하여 부분적인 속인주의를 적용하였다. 지금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¹⁰⁾ 복잡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국적 부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하지만 현 마크롱 정부는 정책 차원에서 해외전문인력 유치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2. 사회·정치적 배경

프랑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공화주의 기반 위에 동화주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귀화한 이주민들에게만 프랑스 시민과 같은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민들이 프랑스 시민이 되도록 압박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는 이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국적을 취득해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웠고 학교교육 역시 공화주의적 통일성에 입각해서 이주민들의 인종이나 종교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평등성을 강조하였다,

10) 오정은 (2018).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특성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87쪽.

이런 입장은 1976년까지 프랑스 학교에서 외국인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이민문제는 1950~60년대 유입된 북아프리카 출신 무슬림이주노동자 2, 3세대들이 청년이 되는 시기인 198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이민 2, 3세대들은 인종적·종교적 이유로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에 장기적으로 난관을 겪게 되었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그 양상이 점차 심화되어갔다. 이런 무슬림 이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과 편견에 의한 시선, 그리고 실업문제 등은 결국 2000년대 들어서면서 프랑스 주요도시에서의 폭동으로 비화되었다. 이 비화는 이주민들에 대한 가난과 차별, 인종주의 그리고 특정 민족 출신자들의 집단 거주 등을 원인으로 본다.¹¹⁾

최근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 다른 문화 등에 대한 포용 등에 대한 유럽 스스로의 유럽적 가치에 대한 재검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에 유입된 해외이주민들의 수가 증가하여 정착하면서 이민 2, 3세대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종교적, 문화적 가치로 인한 이주민들과 내국민들과의 충돌로 점화된 사회적 갈등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2009~2010년 유로존 위기를 겪으면서 표면적으로 분출되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황, 각국의 재정 감축과 사회복지 축소, 실업난과 고용 불안 등에 의한 내국민의 불안은 이주민들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되었다.¹²⁾ 그로 인하여 서유럽에서는 이주민 유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해 졌고 각국 정부는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제하고 불법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프랑스도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더니, 점차 외국인 체류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거

11) 황기석(2016), EU의 이주민 사회통합 위기와 통합정책적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19권 제4호, 156쪽.

12) 상계 논문, 160쪽.

주하는 이주민을 강제 추방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폐쇄적 다문화 정책은 특히 2000년대 중반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내무부

장관에 취임할 때부터 심해지더니 대통령 재임 시기 내내 강경한 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2012년에는 사회당의 올랑드(François Hollande)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주민 통제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완화가 예상되었지만, 실제적인 변화 없이 점차 폐쇄적이고 통제적으로 변화되어 왔다.¹³⁾ 이렇듯 프랑스의 반이민정서는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문화와 정체성의 충돌 등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불황이나 빈곤에 따른 사회적 난제들이 가세되어 기존의 종교적, 문화적 가치의 충돌에 따른 반이민정서를 더욱 가중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무슬림에 의한 테러는 반이민정서를 더욱 확산시켰다. 심지어 극우정당들은 실업난을 이주민 탓으로 돌리는 등 반이민정서를 정치에 악용하여 더욱 부채질하였다. 특히 극단주의적 이슬람 세력에 의한 연속적인 테러는 유럽 내 이슬람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적대감까지 양산하였다.¹⁴⁾

반이민정서로 심각한 갈등 하에 2017년 5월, 중도파의 마크롱(Emmanuel Jean-Michel Frédéric Macron)이 39세로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정책과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였고 다문화주의의 중요성 및 이주민과 난민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하였다. 마크롱의 등장으로 프랑스나 유럽사회가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퇴보해 가는 길이 완화되는 듯 보였다. 극우파 정치인들이 동화주의적 통합정책의 타당성을 프랑스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한 반면, 마크롱은 그 정체성을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인 연합의 의미로 역설하였다.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처하면서도 다문화, 다인종의 프레

13) 오정은 (2015). 프랑스의 미성년 이주민 정책 현황과 전망, 통합유럽 연구 제6권 2집, 32쪽.

14) 황기석, 160~161쪽 참조.

임으로 형성된 프랑스의 정체성을 그들 특유의 관용과 온정으로 연합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진정한 프랑스의 정체성이라고 외쳤다. 그의 주장대로 한 나라의 국민 정체성은 역사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고 또 조성되어 가기에 연합과 조화는 정치의 장을 초월하여 다문화사회와 다민족으로 형성된 국가를 밝은 미래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¹⁵⁾ 그러나 비록 현 정부의 수장인 마크롱이 다문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시리아 난민문제와 프랑스 연쇄테러 등으로 증폭된 반이민 정서로 인한 배타적인 다문화정책의 기초를 돌이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미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는 이민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고 또 이민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규범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통합프로그램들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사실 국가 정체성이란 용어는 사르코지에 의해 정치적으로 급부상 되었다. 이산호·김휘택(2017)은 이 국가 정체성과 다문화주의의 긴밀한 관계를 위협하면서도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¹⁶⁾라고 표현하면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한 사회나 국가 정체성은 그 사회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기에 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철우(2017)는 법학논총에서 다문화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윌 킴리카(Will Kymlicka)와 보편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를 비판해온 크리스티안 욥케(Christian Joppke)에 대한 주장을 비판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되었던 몇 사례들을 분석한 뒤 유럽 다문화주의 정책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쳤다. 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다문화

15) 이산호·김휘택(2018), 마크롱 시대와 탈이념적 정체성,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8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26쪽.

16) 이산호·김휘택(2017), 국가 정체성과 다문화주의, 그 위험한 관계,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4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42쪽.

사회의 마찰로 인한 사례 연구들은 다문화주의의 문제들과 정책에 대한 현주소를 분석해볼 수 있기에 연구의 가치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최희진(2019)은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 정책의 이데올로기와 한계를 상호주의의 타자성 개념에서 도출하고 있다. 즉 상호문화주의는 언어와 문화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역동성 그 자체이기에 그 문제점을 거기서 찾고 해결하고자 한다. 한 사회의 바탕이 되는 정신적 기조와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연계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려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지속적인 연구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민경(2018) 역시 프랑스의 언어문화교육 정책에서 다문화사회통합을 분석하여 한국사회로의 시사점을 역설한다.

이러한 프랑스와 유럽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논문들은 향후 우리의 다문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프랑스 다문화정책

3.1. 다문화정책의 특징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긴 역사 동안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한 이민 국가이다. 19세기 후반 요구되는 노동력, 두 차례의 세계대전 후의 국가재건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산업화로 성장하는 시점에 대규모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프랑스로 유입되었다. 이주민들의 유입과 정주는 프랑스의 인구 정책에 안정을 가져다주었고 그들의 노동력은 프랑스의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프랑스에 영구적으로 정주하게 된 이주민들이 사회구성원이 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문화사회가 되었다.¹⁷⁾

17) 이정욱(2010), 프랑스의 사회 갈등과 통합, 부경대학교 박사논문, 264쪽.

프랑스 정부는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동화주의를 채택하였다. 이 동화주의 모델에서 시민 통합의 핵심적 특징은 강제성으로 프랑스 동화주의가 내포하는 의미는 종교, 문화, 그리고 인종 등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질적인 것을 프랑스적인 것으로 융합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이주민 동화주의 정책의 공화주의 가치에 기초하는 목적은 어떠한 가치로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프랑스’의 유지에 있다. 따라서 이국적인 문화집단의 발현은 프랑스의 정체성을 위협하기에 금지되어야만 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소수 문화 집단들이 소유한 가치와 생활양식, 종교 등은 프랑스의 정체성과 문화에 융해되어 사라져야만 하는 당위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동화주의는 프랑스 이주민 사회통합의 상징이며 실체이며 이주민을 프랑스 사회로 완전하게 통합해 나가는 긍정적인 모델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2005년 방리유(Banlieue) 소요사태는 프랑스가 시행해왔던 통합모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생채기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 통합정책의 위기나 실패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이주민 집단과 공존하는 현실에서 표출되는 계속적인 마찰과 갈등이 그 반증이다. 실제로 프랑스 무슬림 이주민들은 다양한 인종들로 초기 이민자들은 대부분 문맹이었다. 이민자의 자녀들은 프랑스 교육시스템 안에 있었으나 경제적인 이유와 삶의 영역 제한으로 중도에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많았다. 따라서 악순환의 고리처럼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었다. 프랑스에서 무슬림의 실업률은 프랑스인들에 비해 평균 두 배가 넘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았다. 이 높은 실업률은 그들의 열등한 지위를 대변하였고 인종 차별 때문에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저임금 직업에 고용이 되었다.¹⁸⁾ 이런 누적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결국 폭동으로 분출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18) Christopher, Caldwell(2000). *The Crescent and the Tricolor*, The Atlantic Monthly, 286, no. 5 November: 30.

여러 학자들은 프랑스의 이주민 사회통합 위기의 원인을 공화주의적 동화주의 모델에서 찾는다.

동화주의와 함께 또 다른 주요 정책은 반차별주의로 프랑스인인란 인종과 민족적 혈통, 그리고 종교에 상관없이 프랑스 시민으로 통합되었기에 평등하다는 것이다.¹⁹⁾ 이 평등 정책은 교육에도 반영되어 프랑스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교육권이 보장된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도 자녀의 학업이 끝날 때까지 부모에게 임시체류 허가증까지 발급해 주어서 합법적으로 프랑스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책에서 공통 언어와 문화를 소유한 공화국 시민의 가치함양이라는 제도권 내 교육 목표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자국의 시민으로 통합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민 통합 교육의 방편은 언어교육으로, 학교교육에서 초등학교는 입문반, 중·고등학교에는 안내반을 설치하여 다문화교사가 해당학급의 담임을 맡아 이들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일반학급으로 통합되도록 프랑스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언어교육을 위해 특별학급을 등록하는 이중등록제를 채택하여 학생들에게 수준별로 언어를 교육한다. 또한 출신국에 대한 언어, 문화를 지원해주는 기관으로 ELCO를 운영하고, 이를 정규학교 과정과 연계 수업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모국어 배우게 함으로써 정서적 이중 언어교육을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다문화교육은 평등이라는 공화국 원칙하에 교사나 학교에 의해 문화가 다른 학생들 사이의 상호이해와 협력 등에 한정된다. 주요 다문화교육으로는 출신지 언어와 문화교육 센터 운영, 통합반, 적응반, 통합보강반으로 나눈 프랑스어 교육이 있다.²⁰⁾

19) 김현주(2015), 1990년대 이후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다문화정책의 변화, 프랑스문화연구 제31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452쪽.

20) 박찬인(2016), 프랑스와 미국 다문화 가정 이주민의 문화적 언어와 문화적 갈등 극복, 인문학연구 통권101호, 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 416~417쪽.

또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프랑스 다문화정책은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프랑스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킨다는 방침을 통해 특히 이주민의 경제적 사회통합을 개선하는데 주된 목표가 있다. 여기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사회통합계약’의 경우에 도시정책과 지역적 이니셔티브와 연계되어 국가와 지방·지역의 행위 주체들이 공동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다.²¹⁾ 즉, 중앙정부에서는 동화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만, 지방정부와 현장에서는 다문화주의 원칙과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전문기술직 이주민에 대해서는 다문화주의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생산기능직 노동자에게는 차별배제정책을 적용하는 이중적 잣대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특별한 다문화정책 : 미성년 대상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과 동일하게, 프랑스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을 통제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랑스 다문화정책은 갈수록 폐쇄적이고 통제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러한 강경정책이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관대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예로 1945년 11월 2일 행정령(Ordonnance du 2 novembre 1945)에 18세 미만의 미성년 외국인을 프랑스에서 추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지금까지도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미성년 이주민은 불법으로 입국하였다라도 체류를 허용하고 또 일정기간 체류한다면 프랑스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라면 프랑스 가정의 자녀와 동등하게 의무교육, 복지, 의료서비스, 진로지도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인인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외국으로 추방되더

21) 황기석(2016), 157쪽.

라도 미성년자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프랑스에서 생활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²²⁾

한편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미성년 이주민을 성인 이주민과 구분하고 프랑스 사회 구성원으로 적극 포용하는 이유를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기 쉬운 미성년자를 공화국시민으로 만들려는 동화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프랑스 대중이 미성년자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관용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프랑스 특유의 인도주의적 사회분위기의 영향이라고 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적극적인 미성년 이주민 포용 정책이 성장하는 미성년자들에게 긍정적이며 프랑스 국민들 대다수가 현재의 프랑스 미성년 다문화정책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관대한 미성년 이주민 정책은 주변국과 비교해도 매우 인도주의적이고 포용적이다. 하지만 유럽이나 프랑스에서 증폭되어가는 반이민정서를 고려해 볼 때, 현재와 같은 프랑스의 관대한 미성년 이주민 정책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지는 의문이다.

프랑스 미성년 이주민 정책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²³⁾

첫째, 미성년자의 프랑스 체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대다수 국가들은 외국인 출입국 및 관리 정책에서 미성년 이주민을 성인 이주민의 동반인으로 인식하고 보호자인 부모나 성인 이주민의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보호자격인 성인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성년 이주민의 체류를 허용한다. 게다가 미성년 이주민 체류 허용 과정에서 해당 미성년자의 특별한 재능이나 사회통합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성년자 스스로 프랑스 체류를 희망하는가이다.

둘째, 합법 체류나 불법 체류에 상관없이 미성년 이주민에게 프랑스인 자녀와 마찬가지로 교육, 복지, 의료, 진로 등 다방면의 지

22) 오정은(2015), 31쪽.

23) 상계 논문, 53쪽.

원을 한다. 많은 국가들이 미성년 이주민 지원을 언어학습과 정규 교육 이수 등 교육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는 미성년자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셋째, 미성년자에게는 외국인 신분일지라도 프랑스의 일반가정 미성년 자녀에게 제공되는 거의 대부분의 법적 혜택을 제공한다. 프랑스 국내법에서 아동을 위해 규정한 조항들은 대부분 외국인 미성년자에게도 동등한 아동의 자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이주민의 경우는 위기에 처한 아동으로 유권해석하고 사회보장 제도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한국의 미성년 이주민 관련 지원이 부모의 신분 에 따라 차별화되고 해당 미성년자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여부를 철저히 구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미성년 이주민을 성인 이주민과 달리 적극 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도 있다. 정부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기 쉬운 미성년자를 적극 공략하여 이주민도 공화국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들을 프랑스 정신이 투철한 공화국 시민으로 만들려는 고차원의 동화주의 정책을 쓴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프랑스 대중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도주의적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정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핵심은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미성년 이주민 포용 정책이 비록 이주민라고 해도 미성년자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는 사실이다.

4.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고찰

제4장에서는 앞서 살펴 본 프랑스 다문화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문제점들을 먼저 제시한 다음 그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4.1.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프랑스 이민 양상은 1970년대 후반부터 노동 이민에서 이주 이민으로 변천하게 되는데, 이 현상이 발생되면서부터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문제가 중요한 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식민 지배 이후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많은 노동이주민들이 프랑스로 이주한 역사적 배경은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인권 개념과 맞물려 가족이민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탄생시켰다. 가족이민과 더불어 여성과 미성년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노동 이주민들과 그 후손들이 오늘날 프랑스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프랑스 다문화 가정의 특징은 프랑스 국적을 가졌으며 자신들의 문화적 특징을 고수하며 프랑스 문화권에 속하지 않은 많은 이주민과 그들의 2, 3세들이 식민지배와 해외 영토, 속주주의라는 독특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긴 이민의 역사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일관적으로 이주민의 완전한 동화에 기초한 공화주의적 통합을 주창해왔다. 그러나 가족 단위로 공동체를 이루는 이주민들이 많은 프랑스 다문화 가정의 특징에 따라, 자신들만의 문화 고수와 집단 정체성을 공공연히 드러내려는 이주민들의 생활 방식은 고유한 공화주의적 가치들을 절대시하는 프랑스식 사고방식과 사회적인 마찰과 충돌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충돌이 종교, 인종과 같은 미묘한 문제와 결합되면서 다문화정책 문제는 히잡 사건과 2005년 소요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프랑스 사회의 중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이민의 역사가 이미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럽계의 이주민들과는 달리 아랍과 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은 인종적 외양뿐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사회 동화와 흡수가 어려웠던 것이다. 또한 합법이나 불법 여부와 출신 문화권과 상관없이 프랑스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주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많은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해 빈곤의 문제까지

연결되어졌다.²⁴⁾ 이러한 평등이 배제된 사회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프랑스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든 프랑스의 주류사회와 문화에 동화되고 싶다는 강한 욕구와 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또 하나의 난제는 문화적 정체성 문제이다. 특히 마그레브 출신 무슬림과 같이 인종적 외양과 문화적, 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프랑스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경우가 심각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방황하기도 한다. 종교적 관습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학부모들의 경우, 비종교성의 가치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프랑스 학교의 방침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한 부모의 문화적 혼란은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전달된다.

프랑스는 현재도 계속 마그레브 및 이슬람계 이주민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인종차별과 학교에서의 히잡 사건 등의 사회적 갈등과 논쟁, 그리고 2005년 11월 방리유 사건을 기점으로 2015년 11월 ‘파리 테러’와 2016년 7월 ‘니스 테러’ 등으로 이주민 문제와 난민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IS 등의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연속테러로 인한 사회적, 인종적 갈등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극심하다.

4.2.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위에서 언급한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가장 먼저는 프랑스인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특히 무슬림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여론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에서 무슬림 이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후 프랑스인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주민

24) 박상영(2011), 31~32쪽.

통합 실패의 주된 원인을 이주민들에게 전가하였다. 프랑스인들은 이주민들이 사회 동화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²⁵⁾ 그러나 프랑스인의 무슬림 책임론은 정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이주민통합 실패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은 실제로 이주민을 포용하지 못한 프랑스 공화주의 통합모델과 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인의 무슬림 책임론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는 출신,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한 공화국이 무슬림 이주민 앞에서는 전혀 평등한 공화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화주의 통합모델은 이주민 각 개인이 공화주의 원칙을 따르면,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공화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공화주의 원칙에 근본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만연된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다. 결국 공화주의 모델은 프랑스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부모세대와는 다르게 종교적 정체성을 주장하지도 않는 무슬림 2~3세대들마저도 진정한 시민으로 만들어주지 못했고 이등 시민 또는 이방인으로 전락시켰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었다.²⁶⁾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주민 문제가 프랑스사회의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공화주의 모델은 이주민을 사회로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배제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프랑스 정치권에서 선거 전략으로 무슬림 이주민들을 공화국에 위협되는 위험한 집단으로 몰고 감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연구 결과, 실제로 2005년 방리유의 이주민 소요사태에 가담했던 무슬림 2-3세대들은 어떠한 종교적, 정치적 요구도 없

25) Ifop/Le Monde 2010년 12월 7~9일과 Pew Research Center 2011년 3월 21일~5월 15일에 실시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무슬림들과 나쁜 관계나 사회통합에 대한 무슬림들의 책임에 대해서 프랑스인들은 각각 62%와 68%로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26) 김승민(2013), 프랑스 이민자통합 실패원인, 유럽연구 제31권 1호, 231쪽.

었다. 그들은 프랑스사회의 전복으로 이슬람화를 꿈꾸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도 아니었고 반유대주의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이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없었다. 단지 그들은 프랑스사회에 공화국의 기본가치인 평등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프랑스의 무슬림 이주민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종주의로 인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타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편 프랑스 공화주의 통합모델은 차별받는 소수 이주민집단을 위한 다문화정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인 다문화정책만으로는 이주민통합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무슬림 이주민을 포용하고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프랑스 사회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²⁷⁾

고상두·기주옥(2013)은 프랑스에서 이주민 폭동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 폭동의 요인으로 평가된 세 가지 원인을 독일과 비교,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이주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폭동들이 대부분 경찰과의 충돌로 인해 촉발된 만큼 경찰과 이주민의 관계가 연구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경찰과의 관계에서 프랑스 이주민들은 독일 이주민들에 비해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경험하였고, 그들에게 매우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2005년의 폭동과 2007년 폭동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곧 사회와 국가에 대한 분노로 연결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계도화 요인이다. 외국인 집단지역은 단순히 이주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고실업과 저소득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사회적 배제와 소외의 장이 되는 곳이다. 이주민들의 인종적 배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주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 2-3세대는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도화는 파리와 베를린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

27) 상계 논문, 231쪽.

로 프랑스에서만 발생한 폭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역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지원정책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가 드러났다. 2000년대 이전 프랑스의 복지정책은 매우 큰 빈곤 해소 효과를 나타냈지만 우파정권의 집권 이후 그런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이주민과 현지인들과의 빈부 격차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독일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이주민과 현지인들과의 빈곤율 차이는 오히려 감소했다. 결국 프랑스 이주민들은 복지서비스의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경험하였고, 이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분출하는 배경이 되었다.²⁸⁾

이 연구는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프랑스에서 이주민의 폭력적 시위가 빈번한 데 경찰의 이주민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이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의 감축이라는 배경적 요인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유럽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례들도 분석한다면 이러한 배경요인이 특정 집단의 폭동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

앞에서 프랑스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프랑스 다문화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공부정의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상호 이해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틀 안에서 개별적인 문화를 포괄하고 아우르는 다문화

28) 고상두·기주옥(2013), 프랑스 이주민 폭동의 원인, 세계지역연구논총 32집 1호, 105~106쪽.

적 정체성을 통해 접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은 분리와 배제가 아닌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편견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프랑스 사례는 엄격한 통제와 관리만으로는 다문화 시대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다문화사회의 진정한 통합은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한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국가 사회적 과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및 유럽사회에서 보여주었던 이 문화적 비관용성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갈등 비화로 다문화정책의 변화를 초래한다. 우리사회 역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통합정책을 강조함으로써 빚어질 사태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사회도 정책 실행 이전에 먼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서서히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다문화정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다문화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다. 그동안 프랑스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사회통합정책을 단순히 국가가 시행하는 차원에서 진행해왔다는 것이며 그 문제점을 지금의 다문화사회의 위기에 직면하여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유추된다. 이러한 프랑스 및 유럽의 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교훈은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다문화정책으로는 실질적인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향후 다문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

프랑스의 사회통합 현실은 한국사회에 여러 가지의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의 경험은 한국사회에 선제적인 다문화정책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점진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 그리고 일반적인 삶 속으로 융합될 수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 사회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합리적이고 차별 없는 체류 및 영주권 관련법제의 마련과 평등하고 공정한 고용, 교육, 주거,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이주민들 역시 ‘우리’ 라는 공동체로서의 감정을 가지게 될 때에야 진정한 차원의 다문화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²⁹⁾

마지막으로 논하고자 하는 점은 프랑스의 미성년 이민자 다문화정책이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1970년대 이래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이 점차 강경하고 폐쇄적인 관리 정책으로 변화해 왔지만 미성년 이주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제공하던 가족수당 제도를 2013년 5월부터 외국인 자녀 가정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제 불황과 안보위기 상황과 극우정당이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상황에서도 프랑스 국민은 미성년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은 드러난 적이 없었다. 이것은 프랑스 대중들이 다문화정책에 대한 찬반에는 관계없이 여전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³⁰⁾ 최근 유럽에서 반이민주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프랑스 이민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폐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성년 다문화정책은 이미 법과 제도를 통한 포용적 정책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정부도 수용하여 한국의 현 사회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6. 나가기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프랑스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앞에서 프랑스 다문화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들도 고찰해

29) 황기석(2016), 162쪽.

30) 오정은(2015), 54~55쪽 참조.

보았으며 이제 본 장에서 몇 가지 제언과 함께 마무리하고자 한다.

서구와는 달리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였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다문화정책이 결혼이주민들에게 치중되어 있다는 것과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형태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현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 규범적으로는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도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통합을 한국사회의 적응으로 제한하여 단순히 한국어 지원교육과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일방적인 통합이 아닌 이주대상에 따른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 차원에서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자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교육과 시민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포괄적인 다문화정책의 시행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타문화와 자문화 사이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배양할 수 있는 여러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 결성 및 지원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주민과 자국민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 역시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여러 가지 실패를 거울삼아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그 한 방편으로, 프랑스 미성년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사회에 토착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 역시 다문화가정 자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단순한 동화가 아닌 사회의 주류와 공동체 주역의 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평등과 조화로운 공존 속

에서 평화롭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상두·기주옥(2013). 프랑스 이주민 폭동의 원인, <세계지역연구논총> 32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89쪽~110쪽.
- 김승민(2013). 프랑스 이민자통합의 실패 원인, <유럽연구> 제31권 1호, 한국유럽학회. 211쪽~231쪽.
- 김현주(2015). 1990년대 이후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변화, <프랑스문화연구> 제31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441쪽~468쪽.
- 마은지(2015). 프랑스 이주민의 민족 통합,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Homo Migrans> 13집, 이주사학회. 30쪽~59쪽.
- 박상영(2011). 프랑스 다문화 학교교육정책 분석, 전남대 박사논문.
- 박찬인(2016). 프랑스와 미국 다문화 가정 이주민의 문화적 언어와 문화적 갈등 극복, <인문학연구> 통권101호, 충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409쪽~430쪽.
- 오정은(2015). 프랑스의 미성년 이주민 정책 현황과 전망, <통합유럽연구> 제6권 2집,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31쪽~59쪽.
- 오정은(2018).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특성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287쪽~1304쪽.
- 이민경(2018).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프랑스의 언어문화교육 정책, <현대사회와다문화> 8(1),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88쪽~116쪽.
- 이산호·김휘택(2017). 국가 정체성과 다문화주의,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4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39쪽~62

- 쪽.
- 이산호·김휘택(2018). 마크롱 시대 탈이념적 정체성,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8집,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5쪽~228쪽.
- 이정옥(2010). 프랑스의 사회 갈등과 통합, 부경대학교 박사 논문.
- 이철우(2017). 다문화주의의 지속가능성, <법학논총>, 30권 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쪽~254쪽.
- 정해수(2016). 한국의 이중언어 정책에 관한 비교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 논문.
- 출입국·외국인통제본부(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4월호, 법무부
- 최희진(2019).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 정책의 이데올로기와 한계, <다문화사회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165쪽~187쪽.
- 황기석(2016). EU의 이주민 사회통합 위기와 통합정책적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19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135쪽~167쪽.
- Caldwell Christopher(2000). *The Crescent and the Tricolor*. The Atlantic Monthly, no. 5 November.
- Ifop/Le Monde(2010). 12월 7~9일 실시 여론조사. (Regard croisé France/Allemagne sur l'Islam)
- Pew Research Center(2011). 3월 21일~5월 15일 실시 여론조사. (“Muslim-Western Tensions Persist”,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Washington DC, July 21.)
- Sofos, Spyros A. and Tsagarousianou, Roza(2013). *Islam in Europe, England*: Palgrave Macmillan.

필자 소개

성 명 : 김현진

소 속 :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7번길 20 [우편번호]48443

전화번호 : 010-2124-3399

전자우편 : victoria925@naver.com

투고일: 2020. 7. 10 / 심사일: 2020. 8. 6 / 심사완료일: 2020. 8. 12